

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방안

발표 순서

I

청년과 여성 고용 현황과 한계

II

청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 실효성 제고

III

청년과 여성 일자리 중점정책별 보완 방안



청년과 여성 고용 현황과 한계

청년과 여성 고용 현황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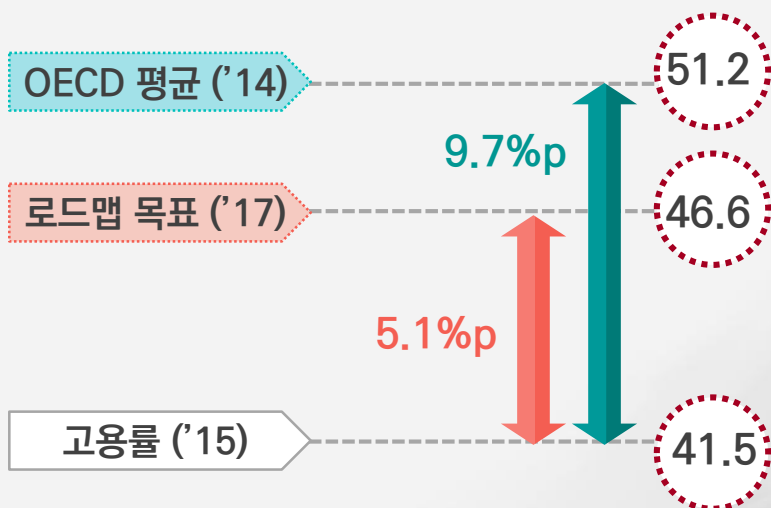
청년 고용

■ 현황

- 41.5%(’15)로 ’12년 대비 1.1%p 증가

■ 한계

- 금융위기 이후 40% 초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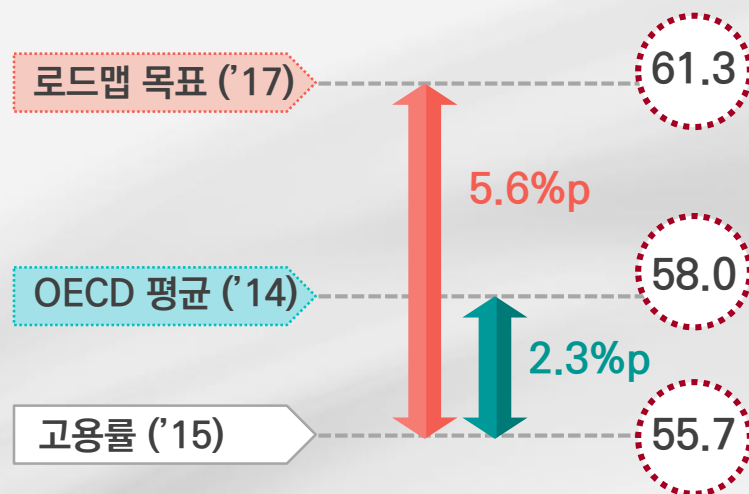
여성 고용

■ 현황

- 55.7%(’15), ’12년 대비 2.2%p 증가

■ 한계

-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저조



고용률 부진의 원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청년

- 인력수급 불일치, 에코세대 신규진입, 베이비붐세대 체류 증가
⇒ 취업 준비기간 증가, 노동시장 진입 지연

여성

- 출산·육아·자녀교육,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저조
⇒ 여성의 경력단절 지속

일자리 지원정책의 한계

복잡한 전달체계

- 일자리 사업, 지원체계 등이 기관별·부처별로 복잡 및 분절
⇒ 혼선 및 비효율, 이용자 혼란 초래

낮은 실효성

- 일자리사업 중첩, 막대한 재정투입, 홍보부족
⇒ 정책 효과성 및 사업 인지도 저조



청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 실효성 제고

5대 실효성 제고 원칙

1

재정지원 일자리정책 효율성 전면 재검토

정책대상·목표 중첩 ⇒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및 조정·통합

2

고용Zone·청년희망재단 중심 민관협업 추진

정부주도 ⇒ 민관협업

3

기업에서 개인으로 고용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사업주 중심 ⇒ 사업 전면평가 및 근로자 직접지원 강화

4

저소득층 근로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시혜성 정책 ⇒ 일자리 연계 지원

5

수요자 맞춤형으로 일자리 지원 정책 홍보 강화

공급자 편의 ⇒ 수요자 맞춤형

재정지원 일자리정책 효율성 전면 재검토

■ 정책대상 및 목표중첩, 비효율적 예산 배분 ⇒ 정책효과 반감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13개 부처

57개 사업

총 2.1조원 규모

부처	사 업 명	'16 예산 (백만원)
고용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374,055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10,136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8,317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102,353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7,868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02,353
산자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12,481

■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 청년여성일자리 정책 우선, 정책피드백 강화

사전평가

모니터링

평가 및 제언

개선권고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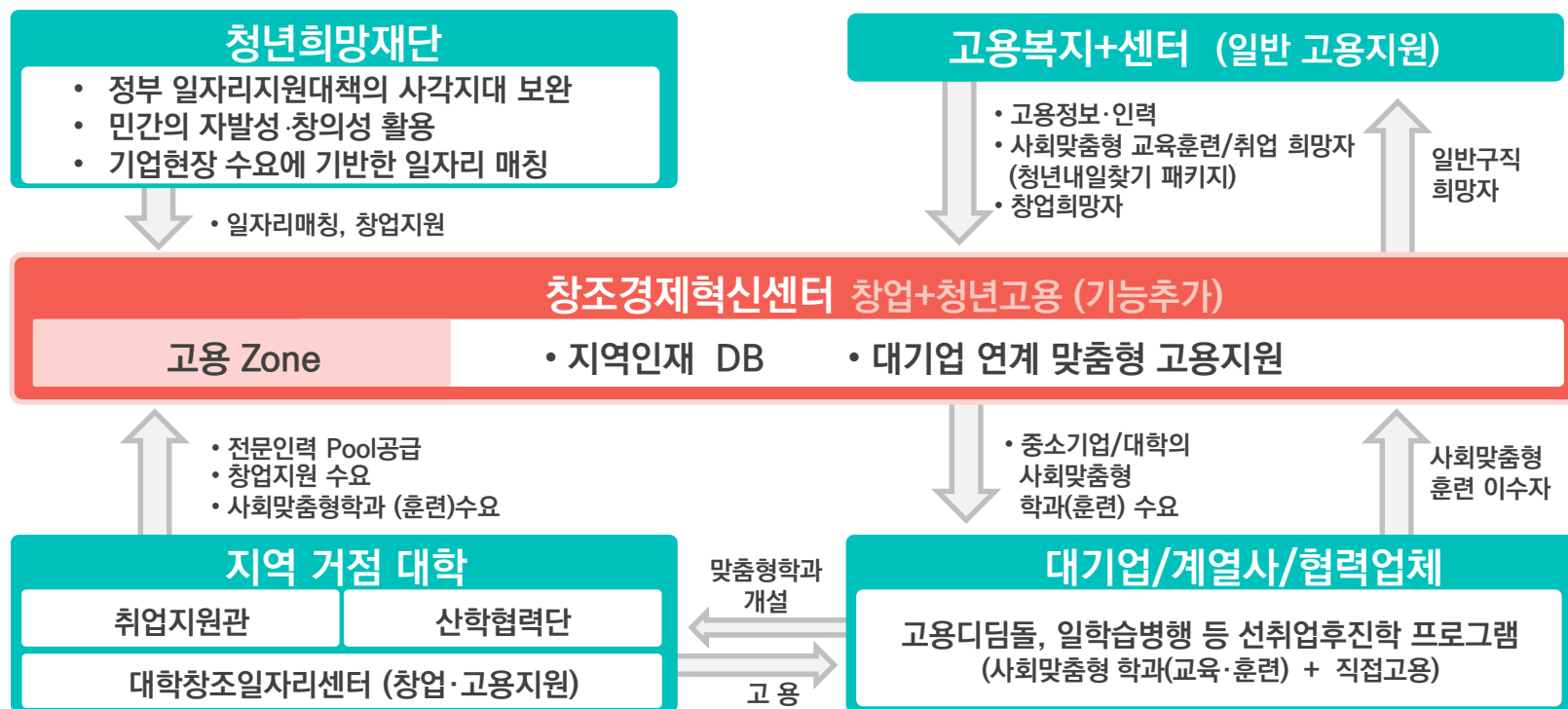
■ 청년 및 여성 일자리사업 조정 및 통합 : 부처간 상시 협의체 운영

고용 Zone · 청년희망재단 중심 **민관협업** 추진

■ 일자리정책 집행 시 민관 협업체계 부족 ⇒ 고용서비스 기능적 연계 미흡

■ 고용Zone을 통해 10만명 이상 취·창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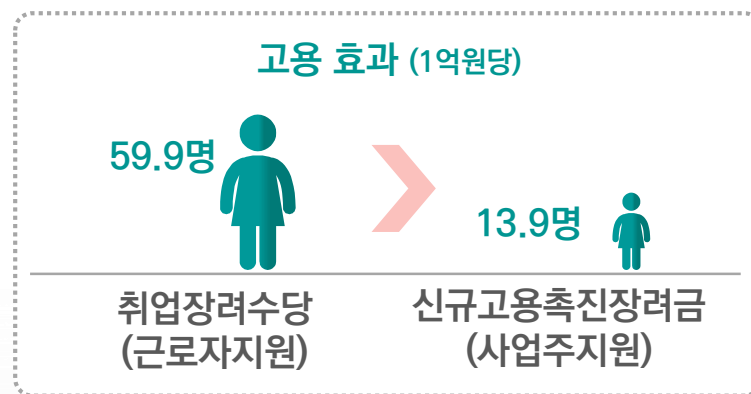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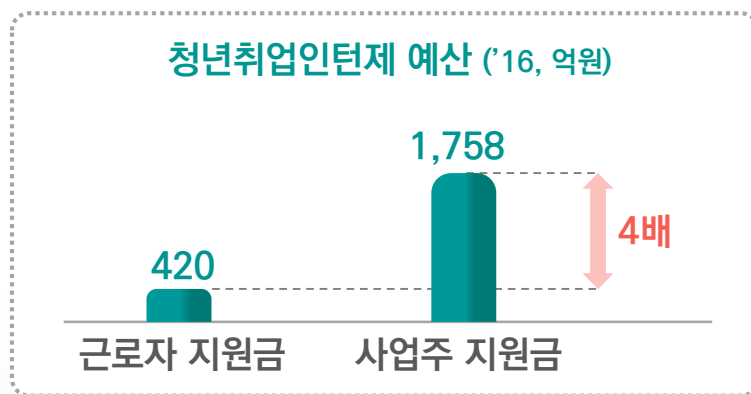
- 일학습병행제,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 학과, 기업대학 등



기업에서 개인으로 고용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 사업자 위주의 고용보조금 지급 ⇒ 재정투입 대비 고용창출효과 저조
- 근로조건 개선 성과 미흡 ⇒ 고용보조금을 임금인상 보다는 노동비용 절감으로 활용

* 2010년 기준



- 고용보조금 사업 전면 평가를 통한 사업 조정 및 실효성 제고
-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직접지원 병행

- 근로자 직접지원 확대와 함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차등 지급

저소득층 근로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 저소득층 근로청년의 금융부담 가중 및 실업난 지속

–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청년배당 등 시혜성 대책 추진

청년 채무조정 신청



9,519명
(17.7% 증가)

학자금대출 연체율



1.6%
(가계대출 연체율의 약 4배)

청년층 실업률



9.2%
(외환위기 이후 최대)

*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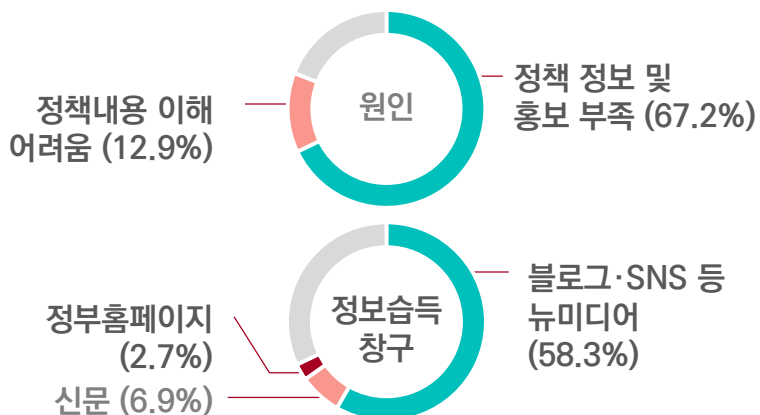
- 시혜성 지원이 아닌 일자리 능력제고, 일자리매칭 방향으로 지원
- 저소득층 청년 특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지원 확대 (창업·일경험 활동 강화방안 검토)
- 중소기업 취업연계 학자금 상환 지원
- 청년단신 가구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검토

수요자 맞춤형으로 일자리 지원 정책 **홍보 강화**

■ 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참여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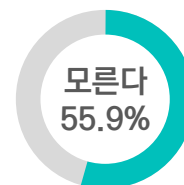
* 2015년 기준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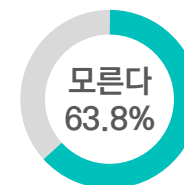


일가정양립 정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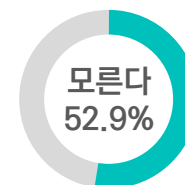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휴직제



유연근로제



■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식 다양화

- 뉴미디어(블로그, SNS, 카드뉴스 등), 연예인 활용 공익 광고 등

■ 대중홍보 강화: 대중교통, 대형마트, 교육기관, 지역문화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활용

■ 재정지원 일자리정책 포털 구축 및 앱개발: 일자리지원정책마중포털



청년과 여성 일자리 중점 정책별 보완 방안



1

일학습병행제 확대

재학생 단계까지 정책대상 확대

2

NCS 제도 확산

공공부문 NCS 기반 채용 확산

3

임금체계 개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로 신규채용 증대

4

K-MOVE 내실화

해외기업과 K-MOVE스쿨 및 청해진 대학 연계

5

미래 신직업 창출

미래진로 선택교육 실시

6

시간선택제 활성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인센티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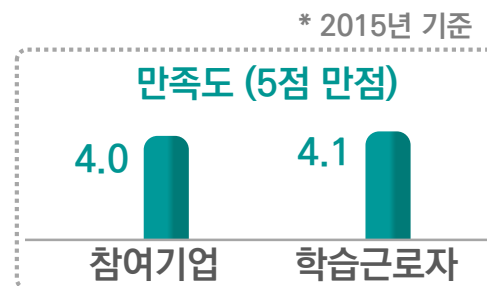
7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Balance! Korea

일학습병행제 확대

■ 참여율은 저조하나 만족도는 높음



- **훈련이수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관한 법률' 제정 포함)
- **졸업생에서 재학생 단계로까지 정책대상 확대**
-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활성화**

*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IPP):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점연계 산학협력훈련제도

현장의 목소리 (일학습병행 업체 방문, '16년 2월)



정부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어
학습근로자의 참여의지가
약화되므로 적기 지급 필요



학습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학위와 연계



학습근로자가 서로 만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제도 확산

■ '15년말 기준, 887개 세분류 중 847개 개발

■ 민간기업의 활용 저조

- NCS 기반 채용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임금, 승진 등 인사 전반에 적용 미진

■ NCS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부족

■ 공공부문 선도적 도입, 민간 확산

- 공공부문의 NCS 기반 채용 확산, 교육·훈련 및 임금체계 개편으로 확대

■ NCS와 노동시장 경력 연계 : NCS 기반 국가자격 개편

■ 대학 등 교육기관 NCS 정보제공 기능 강화

현장의 목소리 (청년 구직자 인터뷰, '16년 2월)



대학 등 공적 교육기관에서는
NCS 준비를 위한 정보와
지원이 없음



사설학원에서 공기업 취직
준비를 하려면 300만원 이상
들어 부담이 큼



NCS 위탁관리기관이 영세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불안감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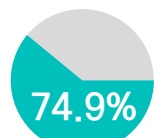
임금체계 개편

- 대기업/금융권 도입 선도, 기타 민간부문은 임금피크제 도입 저조
- 성과·능력중심 임금체계로의 근본적 개편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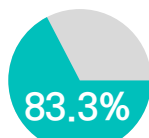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15)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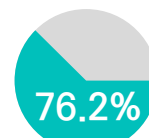


30대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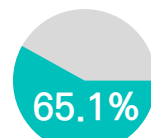


시중은행

100인 이상 사업체 호봉제 비율



('10)



('15)

-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층 신규채용 확대 (노사정 합의 이행)
- 전국 중앙단위(업종별)의 노사협의를 통한 기업규모간 초임 격차 완화
- 실무에 유용한 임금정보의 생산 및 임금정보시스템 개편

현장의 목소리 (고용전문가 간담회, '16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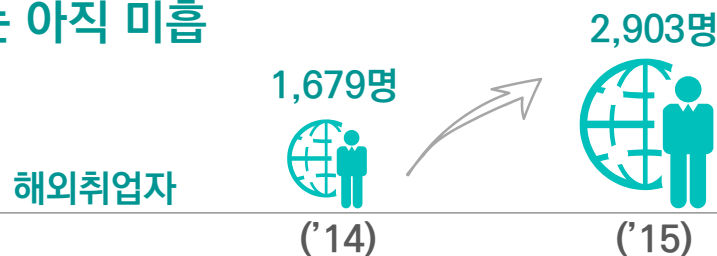


회사에서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려고 해도 직무와 임금체계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를 도와줄 전문가나 기관이 없어 추진하기 어려움

K-MOVE 내실화

■ 해외 취업자 증가추세에도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

- 국가·직종별 차별화 전략 부족
- 현지 네트워크 활용 미흡



■ 해외취업업종 맞춤형 연수·교육확대: 해외기업, K-MOVE스쿨 및 청해진 대학 등과 연계

■ 민간 해외취업연계 우수기관 선별, 육성 및 규제 조정

■ 현지 취업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구인정보 확충, 취업 알선 등

현장의 목소리 (중동 현지방문, '15년 11월)



해외에 청년들을 보내기에 앞서 한국과 해당 지역간의 경제협력 확대 노력이 우선



현지 취업·창업 정보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서 취업하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외취업의 지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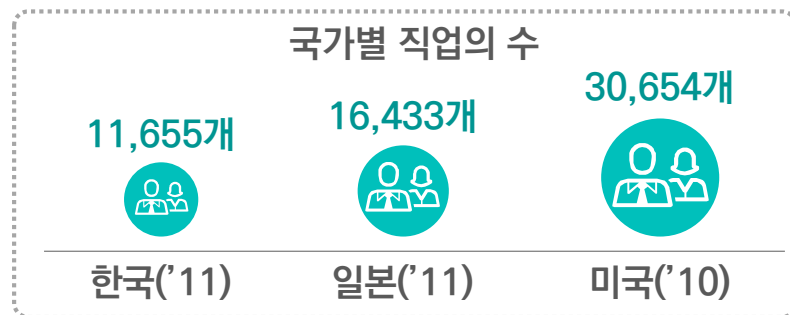
각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언어·문화·생활관습 등)

미래 신직업 창출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직업수가 적음

■ 정부 육성 지원 신직업 발표

(’14년 44개, ’15년 17개)



■ 신직업 규제 완화

■ 신직업 정보 제공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교육기관 등에 콘텐츠 보급 및 홍보

■ 미래진로 선택교육 실시

- 학교에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제공 ⇒ 진로 교육(취업, 창직, 창업 등) 지원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간담회, ’15년 11월)



타투이스트, 민간조사원 등
업역 간의 갈등 및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진전이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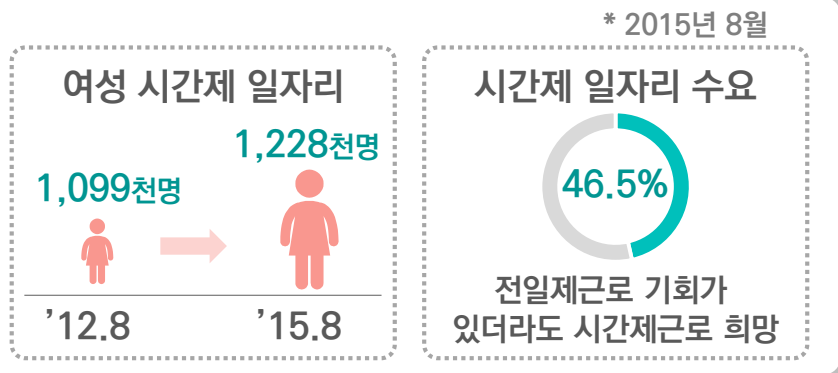
기업전시어지 등 직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확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신직업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여
창업 등 신사업 활동에 어려움

시간선택제 활성화

-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꾸준한 증가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존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여건 미흡
 - 다양한 시간선택제 수요 미충족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의 개별적·분절적 운영



- 생애주기에 따른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추진
 - 육아기·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 연계
 - '휴직제도(육아·질병·가족돌봄)+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매뉴얼 개발
- 대체인력 서비스 지원 확대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고용복지+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의 목소리 (시간선택제 시행업체 방문, '16년 2월)



지원기준이 수혜자 누적기준으로 되어 있어
시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



중소기업일지라도 대기업 집단에 포함될 경우
시간제 근로자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130%,
전일제 근로자와 역차별 문제 발생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남성의 육아휴직은 아직 5.6% 불과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
- 직장 어린이집 설치이행률 미진
- 근무방식 개선 어려움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지연

* 2015년

육아휴직자
87,339명



(전년대비 13.7%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61명



(전년대비 84.7% 증가)

- 활용이 부진한 제도 홍보 강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아빠육아휴직 등)
- 맞춤형 보육, 시간제 보육반, 방과후 아카데미 등 확대
-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일가정양립 캠페인 전개 : **Balance! Korea**
- 가족친화 인증 기업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공공기관 인증 의무화)

해외사례

영국

Work-Life Balance 2000 캠페인

- WLB 리서치, 연구 및 출판
- 웹사이트 개설
- 미디어 홍보

일본

Change! Japan 캠페인

- 고용환경 정비를 위한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 공표
- WLB 어드바이저 양성
- 추진기업 네트워크 구축, 매거진 발행

감사합니다